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

법무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11. 19.(목)

법무부 · 해양수산부 · 공소청 · 경찰청 · 해양경찰청 · 제주도청 등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

- 불법체류 집중단속 및 불법고용 · 알선 브로커 기획 수사 강화 -
- 지역 사회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형사사법기관 협력 강화 -

법무부(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)는 11월 19일(목)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**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**하였습니다.

법무부는 **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**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등 **부작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**하기 위해서는 **철저한 출입국관리** 뿐만 아니라, 제주 지역 **범죄예방 및 수사·기소·공판 등 형사사법 정책 전반**, 관련 **법령과 제도 개선**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, **중앙부처 및 형사사법기관, 제주 지역 법집행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**이 참여하는 **합동 대책회의**를 제주 현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.

※ 종전에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법무부가 개최해오던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「국경·체류·안전 실무분과위원회」를 위와 같이 확대 개최한 것입니다.

이번 회의는 **법무부(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, 형사사법국장), 공소청(제주지방공소청장)**을 비롯하여, **해양수산부·경찰청·해양경찰청, 제주특별자치도**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·제주지방해양경찰청·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·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.

첫째, 입국심사와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고, 불법체류 유발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.

법무부는 **'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'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입국 부적격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**하고, 관계기관과 범죄경력·수배정보 등을 공유하여 불법취업·불법체류 **의심 외국인에 대한 정밀심사를 강화**할 방침입니다.

또한 제주지역 출입국·외국인청,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**불법취업이 빈발한 업종·지역 및 상습 불법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**을 강화하고, **불법취업 외국인의 모집·알선·고용 경위를 집중조사**하여 상습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
후속 조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**'26. 12. 21.(월)부터 '27. 1. 15.(금)까지 (4주간)**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**치안우려 지역, 유흥업소 밀집지역, 상습 불법 고용 사업장 등에 집중단속**을 추진하고, **제주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청이 합동단속에 참여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※ 법무부는 현재 '26. 10. 7.부터 12. 11.까지 타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**직원 17명을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에 추가 파견**하여 총 **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**하고 있으며, 11. 17.까지 **불법취업·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 등 총 540명을 적발**하였습니다.

아울러 **제주발 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도자격 확인 체계 개선**을 검토하고, 어선·화물선 등을 이용한 **불법 운송·무단출도 알선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수사 공조**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또한 제주지역 농어촌에서 **계절근로자 등 합법 외국인력 배정 확대**를 통해 불법취업 유발요인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.

둘째, 제주 지역 외국인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경찰은 **강·폭력범죄 특별단속과 범죄 취약지역 순찰**을 강화하고, 외국인 범죄 발생 시 법무부와 협력하여 **신원확인과 출국정지 요청 등 신속한 초동조치**에 나설 계획입니다.

또한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과 **불법고용·취업알선 브로커 관련 범죄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**를 확대하고,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**마약·대포차 등 다른 범죄도 적극 수사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제주공소청은 경찰 및 출입국 특별사법경찰과 개정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**중요 사건 협력, 중대사건 합동 대응절차 등을 적극 활용**하여 **신속한 영장 청구와 엄정한 공소제기 및 그 유지, 형집행에 만전**을 기하고 **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결정 절차를 단축**하여 **신속한 피해자 보호·지원**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.

※ '26. 11. 5.부터 개정 「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」시행으로 범죄피해자 치료비·생계비 지급 여부 결정 절차 대폭 단축



법무부는 범죄외국인에 대한 **출입국 행정조치(강제퇴거 또는 출국정지 등)**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셋째, 제주 지역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확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제주경찰청·제주해양경찰청·제주도청·제주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은

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 및 기초 질서 계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특히 제주해양경찰청·해양수산관리단은 **항만 등 해상 무단출도 취약지역 관리와 합동 순찰**을 강화하고, 제주도청과 자치경찰단은 **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범죄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 관리**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법무부는 **「제주 무사증 이탈방지 상설 실무협의체」**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, **불법체류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**"제주 지역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, 불법체류 유발구조 차단,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엄정 대응**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**안전한 환경을 조성**하겠다" 고 밝혔습니다.

담당 부서	법무부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 조재철 (02-2110-3547)
		담당자	검 사 이권석 (02-2110-3544)
담당 부서	법무부 이민조사과	책임자	과 장 강성록 (02-2110-4075)
		담당자	사무관 김택균 (02-2110-4082)
담당 부서	법무부 출입국심사과	책임자	과 장 김태형 (02-2110-4039)
		담당자	사무관 이동용 (02-2110-4045)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 심상철 (051-773-5730)
		담당자	사무관 송현주 (051-773-5733)
담당 부서	공소청 형사2과	책임자	과 장 김윤정 (02-3480-4964)
		담당자	검 사 박민경 (02-3480-2905)
담당 부서	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 오창한 (02-3150-0141)
		담당자	경 정 백의형 (02-3150-2063)
담당 부서	해양경찰청 외사과	책임자	과 장 방영구 (032-835-2000)
		담당자	경 정 윤기성 (032-835-2168)
담당 부서	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은주 (064-710-3850)
		담당자	팀 장 이영미 (064-710-3851)
담당 부서	제주특별자치도 관광경찰과	책임자	과 장 박상현 (064-710-8910)
		담당자	팀 장 이경배 (064-710-889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